

“북·미 ‘톱다운 외교’ 다시 본궤도 올라섰다”

문대통령 세계 6대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

핵시설 검증 후 완전 폐기·제재 단계적 완화 등 가이드라인 제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새 활로...오늘 비건 특별대표 방한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북미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 북미간 ‘톱다운’ 외교가 다시 본궤도에 올라섰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영변 핵 시설 전부의 검증 후 완전 폐기’와 ‘제재의 부분·단계적 완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타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촉진자’로서 전면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넘어 남북관계까지 아우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새로운 활력을 찾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인터뷰 답변에서 북미간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물 밑 대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이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북미 핵협상의 ‘촉진자’로서 논의의 흐름을 긴밀히 살핀 결과, 협상 재개를 공식화할 시기가 됐다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대화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북미 양국에서는 양 정상직접서 교환을 비롯, 교착에서 벗어날 조짐

이 조금씩 흘러나오며 대화 재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북미 양국을 향해 ‘맞교환 카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북미 간 협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됐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 자체도 비핵화의 지름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동안의 비핵화 논의는 정상 간 직접소통에 기반한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바텀업(bottom up)’ 실무자간 논의를 거쳐 정상이 최종 합의하는 방식)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일관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27~30일로 예정된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측에서 실무협상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지에도 시선이 쏠

린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답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단순한 남북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으로 이어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국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하고, 그러려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질 조치→국제사회 제재 해제·남북경제협력 활성화→동북아 공동번영’으로 이어지는 큰 틀의 청사진을 내보인 셈이다. 이는 북한에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비핵화를 추진할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동북아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한국당 패싱’

여야 “의사일정 진행”...한국당 일부 ‘백지 등원’ 주장도

여야는 2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반복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했다. ‘새로운 협상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6월 임시국회의 ‘반쪽 가동’ 상태는 이어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당리당락으로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에는 거들 선을 그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파행 후) 80일 만에 일궈낸 합의가 한국당의 당리당락 때문에 2시간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며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던 공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국회 소집에 공조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이를 전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의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새로운 협상을 하지 않

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이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된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조경태, 황영철 의원 등 한국당 일각에서는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백지 등원’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특위 구성,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은 국회 정상화 합의 문 전체를 놓고 재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예결특위 구성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를 큰 틀에서 풀어 나가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서 소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장재원 의원이 회의 진행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국민소환제 도입할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업’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절한 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표는 “각국은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에 대해 다양한 패널티가 있는데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

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당리당락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쫓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은 끝없이 계속되는 한국당의 국회 파업과 여야 정치에 맞서 당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총의를 모으는 자리”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산적한 민생 입법을 앞두고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국당에 정말 호소드린다”며 “편식은 건강에 해로운데, 상임위원회를 고르지 말고 모든 상임위의 입법 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활동 연장 불발시 내일 선거법 의결

여야 4당 제1소위 개최...한국당 ‘의회 독재’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6일 오후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심의를 이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을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의회 독재적 반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선거법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내일까지 소위에서 의결을 하고 늦어도 금요일까지 전체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한국당이) 정개특위 연장을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지난해 12월 15일 합의문 누가 갯느냐”며 “3일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에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혁안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주 민주당 특위 연장을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장재원 한국당 의원은 “여야 4당이 정략적 합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바꿔치기 한 선거제도”라며 “선거제 갖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의회 독재적 발

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이 28일까지 의결해야 된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며 “패스트트랙 180일을 줬고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의사행동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제2차 패스트트랙 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4당이 의결에 들어갈 경우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6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부겸 오늘 광주서 ‘자치분권 시대’ 조찬 포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27일 오전 7시 서구 라봉웨딩홀에서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혁신 과제’를 주제로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 김 의원은 지방자치들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치분권에 대한 신념을 밝힐 계획이다.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에 관심있는 당



원 등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2만원의 참가비가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 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